

'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
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(2차)

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'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재공고(2차)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13.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1. 사업 개요

- 전력분야 정책수립·제도개선·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

2. 신규지원 대상과제

(단위: 백만원, 월)

구분	과제명	금액	기간
1	전기공사 부설시공 별점제 도입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	34	4

*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(RFP)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「'26년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(2차)」 참조

3. 신청 자격

-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
-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, 공단, 협회 및 단체
- 학교 및 부설연구소
-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
-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4. 신청요령

○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

-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: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(<http://www.etep.or.kr>)
- 해당 과제의 RFP(과제제안서)를 기준으로 「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」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

○ 전산등록

- 등록처 :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(<http://www.etep.or.kr>)
- 등록기간 : 2026. 8. 13.(목) ~ 8. 26.(수) 18:00까지
-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
- 전산등록 문의처 : ☎ (02) 6007 - 0359

*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

○ 신청서 제출

- 제출마감 : 2026. 8. 26.(수) 18:00까지 제출 (18시 도착분에 한함)
- 제출처 :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, (우) 07236
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

○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 원본 1부
- 주관,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
- 기타 증빙서류 (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)

5. 기 타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
-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
-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
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
- 사업계획서 심사기준
 - － 심의위원회 : 정책개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 - － 심사 방법 :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(마감후 2주이내)
 - － 심의 기준 : 전력산업정책개발 운영지침 제11조(수행기관의 선정)④
-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
 - －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: ☎ (02) 6007 - 0363, 0364
-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



기후에너지환경부



한국전력공사
전력기금사업단

‘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
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(RFP)

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

사 업 구 분	전력산업정책개발	세 부 사업명	정 책 연 구	정책연구 분 야	
과제명	전기공사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				
제안부서	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과			과제제안자	정진욱 사무관
연 구 목 적 및 필요성	○ 건설현장의 전기공사는 대부분 공사업체 규모가 작고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품질관리가 미흡 및 안전사고 지속 발생 ○ 전기공사 부실시공 예방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설계안 마련 필요 ○ 공공발주 공사에 한해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, 시공능력평가에 감점 등 불이익을 주어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시공 방지				
내 용 및 범위	○ 부실시공 방지에 있어 현재 전기공사업법령 체계의 한계 및 개편방향 분석 ○ 공공발주 전기공사 부실벌점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- 국내외 관련 산업분야 유사제도 운영 사례 검토 - 유관법령(전기공사업법, 중대재해처벌법, 하도급법 등) 연계성 분석 ○ 불법하도급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적정 벌점 기준 마련 ○ 벌점제 도입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 효과 및 업계 영향 검토 ○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제안				
계약방법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	○ 일반경쟁 ○ 4개월 ○ 34,000,000원				
활용계획 기대효과	○ 전기공사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 기준 수립에 활용 * 국가 정상화 과제 이행 필요				